K-방산 수주잔고 120조… 시장 다변화로 성장흐름 유지해야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톱티어 K-산업

지난해 방산 '빅4' 합산매출 40조 해외수출 물량 실적 반영 본격화

獨 등 국방예산 바탕으로 추격 차세대 무기 체계 경쟁력 확보와 신흥시장 외연확장 필요성 제기

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글로벌 수주 확대에 힘입어 외형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체결한 대형 계약이 최근 본격적인 납품 단계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이익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 장기화로 각국의 국방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방산업이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빅4 총매출 40조원대로…수주잔고 120조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 '빅4'의 지난해 합산 매출은 40조 452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4대 방산기업의 연매출이 4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합산 영업이익은 4조6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4% 늘었다. 대형 해외 계약이 매출로 잡히면서 수익성까지 동반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6조6078억원, 영업이익 3조345억원을 기록했다. 지상방산 부문 수출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현대로템은 매출 5조8390억원, 영업이익 1조56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영업이익 1조원대를 달성했다. 폴란드 K2 전차 사업 확대와 후속 물량 반영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LIG넥스원은 매출 4조3094억원, 영업이익 3231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4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천궁-II의 사우디아라비아·UAE 수출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며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 KAI는 매출 3조6964억원, 영업이익 2692억원을 기록했다. FA-50PH 추가 계약과 KT-1 사업이 실적을 뒷받침했다. 체계개발을 마친 KF-21은 양산 단계에 들어섰다.

실적의 기반이 되는 수주잔고도 크게 증가했다. 방산 4사의 합산 수주잔고는 2025년 말 기준 1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7조 2000억원, 현대로템 29조7735억원, KAI 27조3437억원, LIG넥스원 26조2300억원 순이다. 확보한 물량만으로도 향후 4~5년간 안정적인 생산과 매출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올해 방산 4사의 합산 매출을 48조184억원, 영업이익을 6조5359억원으로 추산했다. 해외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 경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해당 사업을 수주할 경우 수주 금액 기준으로 방산수출 기록을 새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경쟁 격화…기술 경쟁력 강화 요구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경쟁 구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전통적 방산 강국들이 대규모 국방 예산을 바탕으로 자국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과 생산 역량 확대에 나서면서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올해 66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독일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약 170조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럽 주요국까지 재무장 흐름에 동참하면서 글로벌 수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경쟁력과 성능, 납기 준수 등 강점이 있지만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운 국가들의 추격 속도도 빠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래식 무기 중심의 수출 구조를 넘어 차세대 무기체계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다. 우주·무인체계 분야 투자 확대와 함께 유·무인 복합체계 통합, 지휘통제(C2) 체계 고도화, 통신·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통합 운용 능력이 향후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로 지목된다.

시장 다변화도 병행 과제로 제시된다. 유럽과 중동 중심의 수출 구조를 넘어 북미 진출을 확대하고 남미·동남아 등 신흥 시장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지 협력과 공급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계약이 납품 단계에 접어들며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고 있고 글로벌 군비 확충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방산 수요도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술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를 병행해야 성장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재개된 KDDX 사업… 이번엔 '선도함 단가' 변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업계, 물가상승·환율 변동 등에 사업비 최소 20~30% 증액 주장

정부, 기존 총사업비 기조 유지 업계 요구 수용 시 일정지연 가능성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약 2년 표류 끝에 재개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이번에는 선도함 단가를 둘러싼 갈등에 직면했다. 원가·환율 등 비용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와 기존 총사업비 틀을 유지하려는 정부 입장이 맞서면서 입찰 이전 단계부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증액 폭이 확대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정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7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업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한다. KDDX는 총사업비 7조 439억원을 투입해 6000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개발·건조하는 사업으로, 선도함은 오는 2032년 해군 인도를 목표로 한다. 방사청은 오는 3월 말 입찰공고 후 5월 말 제안서 평가를 거쳐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물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사업비 조정 문제를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앞서 선도함 상세설계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8820억 원 수준으로 산정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분 약 200억 원을 반영한 수치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9000억 원 선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사업 표류 기간 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0~30%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산 편성 시 통상 연 4~4.5%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설계 완료 이후 약 2년간의 물가 상승분만 적용하더라도 선도함 사업비는 8820억 원 기준 약 9500억~9600억 원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입장이다.

함정 원가에서 가스터빈·통합마스트·센서·전자장비 등 외산 장비 비중이 큰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글로벌 방산수요 확대와 환율 변동으로 수입장비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기능 레이더·전투체계·통합추진체계 등 핵심 기술 개발 과제가 포함된 만큼, 추가 지연이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 기간 연장과 시험·평가 비용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전 준비에 투입된 인력과 설비 비용이 매몰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선도함 단가가 후속 2~6번함 건조비 기준이 되는 구조를 들어 한 척당 2000억~3000억 원 손실과 조 단위 누적 손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 단계로, 입찰 공고에 앞서 예산 규모를 일정 수준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총사업비 기조를 유지하려는 분위기다. 총사업비가 계획 대비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 해 업계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전체 사업비가 9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재정 당국 역시 대규모 증액에는 신중한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증액 요구의 현실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상 전폭 수용은 쉽지 않다고 본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업계 요구가 전면 반영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일정 부분 적자 수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향후 함정 건조 과정에서 납기 지연, 계약 이행 리스크, 협력업체 관리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443만원

30대·수도권·은행권·주택대출 집중 부채잔액은 증가세… 누적 규모 확대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이 30대와 수도권, 은행권을 중심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분기말 기준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과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늘어나면서 신규취급 둔화와 잔액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443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409만원 감소했다.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도 2억1286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421만원 줄었다.

신규취급액 감소는 연령·지역·업권·상품별로 보면 30대와 수도권, 은행권, 주택 관련 대출에 집중됐다. 30대(-818만원), 수도권(-808만원), 은행(-889만원), 주택담보대출(-1421만원), 전세자금대출(-1414만원)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이 전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했고 감소폭은 30대가 가장 컸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주도했던 30대의 신규 대출은 2억5533만원으로 전분기(2억8792만원)에서 3259만원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이 줄어든 반면, 대구경북권과 강원·제주권 등은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감소한 반면 비은행과 기타 업권은 소폭 증가했다.

상품별 흐름을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주택외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은 증가해 상품 간 차별화가 나타났다.

다만 분기말 기준 부채 잔액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5년 4분기말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739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65만원 증가했고,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5827만원으로 201만원 늘었다. 이는 분기 중 신규취급액이 줄었더라도 누적 부채 규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중 기준으로는 신규취급액에서 30대(28.9%), 수도권(57.6%), 은행(50.3%), 주택담보대출(40.9%) 비중이 높았다. 잔액 기준으로는 40대(28.8%), 수도권(58.8%), 은행(61.6%), 주택담보대출(51.6%)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의 중심축이 중장년·수도권·은행권·주담대에 집중된 구조가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다. 이와 함께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부터 주담대 한도를 축소했다.

/김주형 기자 gh471@